

|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|
| 배포일시 | 2022년 9월 30일(금) |
| 보도일시 | 즉시              |

## &lt;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&gt;

##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지급, 국가책임 강화

-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(원장 노웅래 의원)은 9월 30일(화) “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지급, 국가책임 강화” 라는 제목으로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발표했다.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“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을 감소시켜 소득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.” 고 설명했다.
- 윤기찬 연구위원은 “현재 하위 70%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여 노인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할 필요가 있다.” 고 지적했다. 윤 위원은 “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상위 30% 어르신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사각지대가 발생시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” 고 설명했다. 그리고 “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 및 월평균 지급액이 낮은 상황에서 어르신의 기본적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해야 한다.” 고 지적했다.
- 보고서는 “기초연금의 선별적 지급에서 보편적 지급으로 확대하는 것이 국가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” 이라고 설명하면서, “여전히 재정적 부담과 소득이 높은 계층에 대한 기초연금 확대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.” 고 지적했다. 이를 해소하기 위해 “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되, 상위 30%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상한선을 하위 70%의 절반수준으로 제한하거나 부부감액, 국민연금 연계 감액, 소득인정액 기준 감액 등의 감액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.” 고 설명했다.

- 이는 “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 후 부부합산, 소득인정액, 국민연금 수급액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감액함으로써,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.” 고 지적하였다. 윤 연구위원은 “윤석열 정부의 하위 70%대상 40만 원 지급의 선별적 복지와 더불어민주당의 하위 70% 40만원 지급, 상위 30% 대상 20만 원 지급의 보편적 복지 간 추가 소요예산을 비교했을 때, 2023년 기준 전체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지급 시 5.1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.” 고 설명했다. 그러나 앞서 설명한 “소득 상위 30%에 대한 부부합산, 소득인정액, 국민연금 등의 감액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줄어들어 재정 부담을 감소시킬 것” 이라고 지적했다.
-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“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,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빈곤율을 약 2%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.” 고 설명했다. 특히 “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은 어르신에게는 국민연금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고, 동시에 상위 30% 어르신 중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위험가구를 해소할 수 있다.” 고 지적했다. 결론적으로 “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보편적 소득보장 수단으로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” 이라고 설명했다.